

장기적 · 안정적인 국가연구개발체제 확립해야

글 | 정광화 _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khchung@kriss.re.kr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성하의 계절이 되었고, 또 금세 연말이 다가올 것 같다. 으레 연말은 분주하게 마련이지만, 올 연말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까지 있어, 각계에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과학기술인 사기진작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

그 동안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비롯한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는 2002년 2.53%에서 2005년 2.99%로 증가하였고, 2007년도 R&D 예산은 9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5% 늘어난 수치다. R&D 예산은 과기부총리체제 출범 이래 2년 연속 복지, 국방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 순위도 2003년 각각 16위, 27위에서 2007년 7위와 6위로 성큼 올라섰다. 우리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의 관심과 인식도 더불어 높아졌다. 2006년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2020년 세계기술혁신보고서'에서 29개의 분석 대상국 중 한국을 미국, 독일 등과 함께 '과학 선진국' 그룹의 7개국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수가 넘는 58%의 사람들이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출범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동안 범부처적 협의와 조정, 그리고 R&D 예산

조정·배분의 전문성·효율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과학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등에 관해서는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연구개발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기초과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몇 가지 과학기술계 발전방안에 대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우선 국가경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인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여 국가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기진작 프로그램 및 젊은 이공계 인력의 유인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교수직은 이공계, 인문계를 구분하지 않고 특수 계층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공계 인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구원들, 특히 출연(연)의 연구원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공계 인력문제를 다룰 때는 출연(연)이나 기업 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및 유인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점도 보일 것이다.

기초분야 연구에 역점 둔 정책 개발을 ...

또한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초분야의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어

정책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기 상용화 성과에 급급한 연구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한국형 선진 복지국가 창출을 위해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기초 과제를 선택하여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의 독특한 연구전담기관인 출연(연)의 역할을 잘 정립함으로써 국가의 아젠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의 성공은 시스템 자체보다는 언제나 시스템 운영자의 능력에 달려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주체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연구기관장의 짧은 임기는 단기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구과제에 치중하게 한다. 선진국처럼 기관장들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일단 선출된 후에는 정년 때까지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적어도 현재의 임기는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매년 진행되는 기관 및 과제 평가 또한 장기적 목표설정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만든다. 기관 및 과제 평가는 매년 실시하지 않고 과제별로 3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하여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내용을 심도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에서 과학기술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그 성과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아젠다를 정하고 장기 목표를 향해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선택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종합 조정하는 강력한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담당부처 공무원 및 지원기관 담당자들은 국가 중장기 연구발전 전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현재와 같은 잦은 교체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총리체제하에서 국가연구개발체계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 위한 과학기술정책 펼쳐야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이 일정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과학기술부를 없애고 산업이나 교육 부처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가간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고 국민 각자 인생에 전주기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과제가 되는 시기에 과학



기술이 그 정체성을 잃고 교육이나 산업 및 경제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이것은 진보가 아닌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는 성장일변도의 과학기술정책이 아닌,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픈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경제발전도 함께 이루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7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후 미국 피츠버그대 물리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3, 4대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진공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